

남북관계, 통일 의식, 그리고 사회 가치

박인섭
고려대학교*

<요약문>

이 논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열망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실제 분석과 관련된다. 70여 년 분단 기간 동안 남북통일을 당연시 하는 관성적인 접근 경향이 지속되는 동시에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차이가 확대되었다. 이 틈새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 그리고 현실과는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서 어떤 점에서 거리감이 형성되고 있는지 등을 해외사례, 특히,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크 삼아서 기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의식에 대한 지배적인 결정론적 접근 경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남북관계 및 통일 의식에 대한 전제조건 변화가 분석의 핵심이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교류 현황 추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 벤치마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진행되는 노력들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 관점에서 간극을 규명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사회가치를 통일 전후 해결해야 할 주요 갈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이 정치교육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이 새로운 기능으로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의식 관련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독립적인 정치교육, 시민교육의 방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어 : 남북관계, 통일 의식, 사회가치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2018년 제 2학기)

I. 서 론

이 논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열망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실제 찾기와 관련된다. 70여 년간의 분단 기간 내내 남북통일 문제와 관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통일은 당연시 하고 접근하는 경향은 관성적으로 굳어졌으며, 동시에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차이도 커졌다. 이 틈새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그 심각성은 깊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 그리고 현실과는 해결해나 가야 할 과제로서 어떤 점에서 거리감이 형성되고 있는 지 등을 해외사례, 특히,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크 삼아서 기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남북한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일반적인 가정 혹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 의식은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대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종 남북통일의식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 응답자의 답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뿌리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지 방향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전제조건에 혹은 입장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이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연구 분석의 출발점은 '누구나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문제이며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시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담겨있는 전망과 바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기대는 현실과 어느 정도로 틈새가 벌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 틈새를 메꿔주거나 잇기 위한 노력들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국민 개개인 모두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은 어떻게 교류되고 있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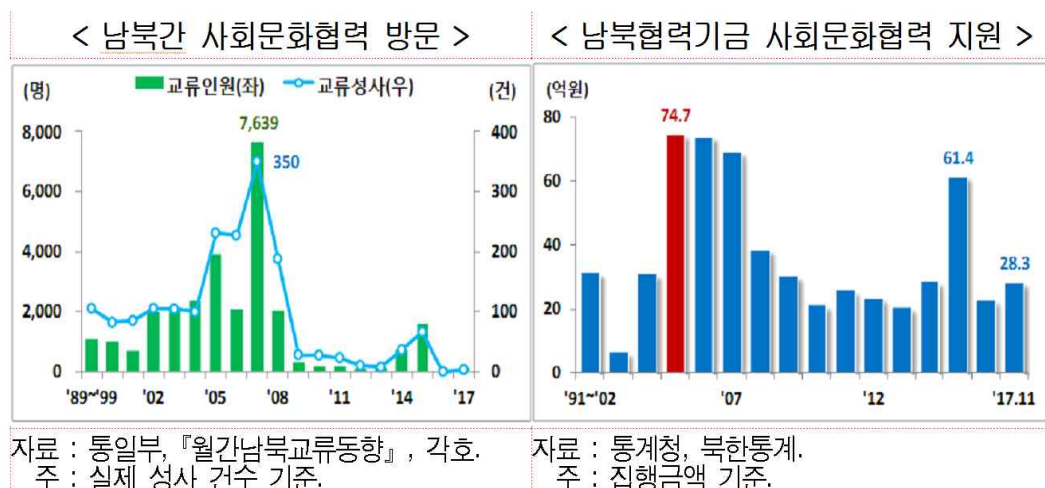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남북관계, 남북통일 등 관련 문헌이나 연구자료에 의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 몇몇 사회과학자들과의 인터뷰도 참고하였다.

먼저 남북한 관계 개선 관점에서 남북교류 현황 추세를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의 통일국가 사례를 벤치마크 하였다. 이것은 남북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진행되는 노력들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 관점에서 간극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각 사례가 처해 있던 조건을 살펴보고, 독일사례를 남북한 관계 개선의 비교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는 긴장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차이점을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간주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가치와 규범 문제를 주요 갈등요인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교육을 통해 독일이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고 풀어갔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이 새로운 기능으로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의식에 어떤 방향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결론으로 맺고 있다.

II. 남북한 교류 현황

최근 2년간 남북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과거에 비해 긴장완화 기 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활동 관심은 커지고, 그 결과 교류협력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 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남북한 교류협력 업무 확대 의지가 조레 개정, 사업계획 발표, 사업추진 등을 통해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남북 교류협력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조레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중앙일보, 2018/6/18). 경기도는 도지사당선 인이 평화경제특구, 평화경제, 평화안보 3개 특별위원회 가동 계획을(경향신문, 2018/6/17) 강원도는 금강산관광재개 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정책 지속방침을 발 표한 바 있다(노컷뉴스, 2018/8/20).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200억원을 확충하고, 경상남도는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부활시켰으며 울산광역시 5억원을 처음으로 조성하였다(매경이코노미, 2018/9/25).

실제 남북간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이지만, 2008년부 터 그 전까지는 2008년 급감하였다. 주로 회담이나 방문 교류 형식으로, 정치 상황에 덜 민감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그리고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1990년 9월에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199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통일부에 의해 승인된 사 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 총 159개이다; 그리고 사회문화협력 관련 방문 현황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77건이며,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방문 수는 1718건이고, 북한에서 남 한으로의 방문 수는 56건이다(이해정 외, 2018).



<그림 1> 사회문화협력 부문 남북간 방문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추세

이들 교류협력의 특징은 체육 위주에서 점차 문화예술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민 족 동질성 회복 등 이념 갈등의 가능성이 낮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 (20.1%), 종교(27.7%), 교육학술(20.0%)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도	91-97	98-02	03-07	08-12	13--16	17	계(건)
건 수	3	27	121	5	3	0	159

<표 2>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방문 현황 (1989~2017년)

구 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시민사회	계(건, 명)
남→북	344 (4646)	163 (2467)	325 (4306)	490 (9735)	303 (2949)	73 (400)	20 (406)	1718 (24909)
북→남	12 (105)	8 (540)	33 (2575)	3 (59)	3 (60)	0 (0)	0 (0)	56 (3339)
합 계	356 (4751)	171 (3007)	358 (6881)	493 (9794)	306 (3009)	73 (400)	20 (406)	1777 (28248)

* 출처: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 각 호 참고 (이해정 외, 2018, 재인용)

* 시민사회 부문은 2009년에 신설

이해정 외(2018)는 아래 <표 3>과 같이 각 부문별 특징은 물론 성과와 한계를 잘 정리해놓고 있다.

<표 3>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특징 및 성과와 한계

구 분	특 징	성 과	한 계
종 교	· '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 지속	· 교류 지속성 · 종교 건물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 비대칭 ·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체 육	· 남북간 상호왕래 가장 활발 · 북→남 방문 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 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왕래 추진 · 남북관계 개선 전환점 마련	· 교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 역사 등 이념 충돌이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부터 추진	· 역사 유적 발굴 및 유네스코 등재, 장기간 지속 사업 추진	· 교육 분야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 공동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 북한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 공감대 형성	·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 장치 미비
문화예술	· 남북 사회문화협력 중 가장 긴 역사 부문	· 남북공동행사의 지속 개최	·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 영화교류도 초보 수준
과학기술	· 북한의 우수 인적 인프라 구비 부문	·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양성 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제약

특히, 교육 부문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교육지원은 'IT'전문교육', 유네스코 국제기구에 의

한 교육자의 중국방문, 교육방법, 영어 관련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과서 용지, 교육기자재, 학교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4>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김지수, 2014, 재인용)

기관	지원품목	활동	
교원단체	교총 및 전교조 공동 (2003-2006)	교과서용지 교육기자재등	남북교원교류 학교방문 공동수업진행
시도교육청	전북교육청(2006) 서울교육청(2004) 경남교육청(2006) 부산교육청(2005)	교과서 용지 교육 기자재 학교시설 개보수	북한학교방문
민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2000~2007) 남북어린이어깨동무(2004)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굿네이버스(2003~) 남북나눔인터네셔널,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교과서 용지 학용품 교육 기자재 육아원시설 개보수 대학 IT인력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IT교육 실시	북한학교방문 대북지원활동
국제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유네스코	교과서 용지, 인쇄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훈련 학습평가 워크숍 영어교육 워크숍 기타(교육자 외국방문연구 등 지원)	북한방문
민간단체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2001~)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교육활동
대학	한양대(2002)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학생 IT교육	

Ⅲ. 해외사례와 평화통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 상태에서 단일 통일국가 형태를 달성한 사례는 독일, 베트남, 예멘 3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통일 방식은 모두 다르다. 독일은 평화적인 흡수통일, 베트남은 무력적인 흡수통일, 예멘은 정치적인 합의통일 후 무력에 의한 재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 2018).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루었으며, 45년간(1945~1989)의 분단 기간 동안 체제간 이질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대립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은 서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으며, 통일 이후의 어려움은 통일비용과 사회갈등 문제에 집중되었다.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의 분단기간 동안 체제간 이질성이 매우 컸다. 적대적인 대립 관계 상태에 있었고, 교류와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 이전 경제사회 발전 정도는 서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통일 이후의 문제는 전후 재건과 경제 침체에 초점이 모아졌다. 1994년에 통일을 이룬 예멘은 23년간(1967~1990)의 분단 기간 동안 체제간 이질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적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적 교류와 간헐적인 협력 정도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은 이루어졌다. 통일 이전 경제사회 발전의 차이는 약간 있는 정도였으며, 통일 이후에는 전후 재건과 사회

혼란 문제를 겪었다.

통일 이전 체제간 이질성, 경제사회 발전의 격차 측면에서 바라보면, 3개국 통일 사례 중 동서독의 관계가 남북한 관계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의 관계가 경쟁적인 대립과 협력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이 더욱 원활해진다면 그 유사성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 하에 아래에서는 독일 사례 벤치마크 하며 논의와 분석을 시도한다.

IV. 남북관계 및 통일 의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긍정적인 가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다. 둘째,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셋째, 남북한 통일은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는 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세 가지 믿음이다.

현실은 70여 년의 남북 분단 상황은 많은 차이점을 지닌 채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이 차이점은 향후에 남북 관계 개선, 통일,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모두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점은 먼저 정치경제 이념에서 시작된다. 정치 이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대립이다. 경제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와 계획(폐쇄)경제주의의 대립이다. 통계청(2016; 최윤재, 2018에서재인용)의 북한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남한이 5,125만명이고 북한이 2490만명으로 남한이 2.1배 많고, 예산 규모는 남한이 미화 2,320억불이고, 북한은 69억불로 남한이 33.6배로 크다.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1,639,066.5억원이고, 북한은 36,373억원으로 남한이 45.1배이며, 무역총액은 미화 9,016.2억불이고, 북한은 65.3억불로 남한이 138.1배이다. 수출액은 남한이 4,954.3억불이고, 북한이 28.2억불로 남한이 175.7배 크며, 수입액은 남한이 4,061.9억불, 북한이 37.1억불로 남한이 109.5배 크다. 언어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미소를 불웃음, 볍음밥을 기름밥, 채소를 남새, 운행시간표를 다님표, 스웨덴을 스웨리예로, 도너스를 가락지빵, 아이셰도를 눈등떡, 골기퍼를 문지기, 점프력을 조약력, 정사각형을 바른사각형, 꼭지점을 꼭두점, 명암을 검밝기 등으로 다르게 말한다. 기대수명도 남한은 81.6세, 북한은 69.9세로 약 12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사망률도 남한은 3.5명, 북한은 24.9명으로 약 7.1배의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규범과 가치에 있어서 북한은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익이 제한되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의식을 전제로 자율성을 인정하는 남한과 다르다.

최윤재(2018)는 남북한 농축산 협력방안 심포지엄 주제강연에서 우리 한민족은 이미 수 천년의 역사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 전통 풍습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명공동체로서 동속의식을 공유해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한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이념의 차이가 있으며, 한민족의 개념과 의미를 부정하는 세력도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는 사람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족이란 의지공동체이며 의지란 변화하는 것이기에 민족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민족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1960/70년대까지는 통일이 최우선이었으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계층이 나타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연

령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 분포(비율)가 다르다(통일교육원, 2018a).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대는 49.7%, 30대는 43.8%, 40대는 43.8%, 50대는 37.2%, 60대 이상은 34%이다. 전체 비율로는 4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 필요성에 있어서도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인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은 2017년 62.6%로 2016년 대비 0.8%p 감소하였고,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55.4%로 2016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47.9%로 초중고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하여, 파트너이자 위협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47%를 차지하였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협력대상은 30%, 오직 위협대상은 21%로 이분법적인 대북관은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42.3%, 대학생은 26.5%이었고,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40%, 55.8%로 나타났다: 협력대상 비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적대대상 비율은 대학생들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통일교육원, 2018b). 대북정책에 있어서 소극적 제재dp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수여론은 13%에 그치고, 지원과 제재를 혼합해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층은 50%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과 제재 모두를 부정하는 냉소층도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리서치, 2018/8/25).

국회예산정책처(2014)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통일시점으로 할 때 통일비용은 4657조원, 통일순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2065년 남한의 고령인구가 3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남북통합 후의 고령인구는 31.4~34.9%까지 낮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8/9/12).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완충기능으로서의 통일 효과 강조이다. 반면에 급진적인 통일은 원화가치 하락 등 국가부도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아시아경제, 2018). 한국리서치의 전국 1000명 정기 웹조사 결과에 의한 월간 리포트(2018)에 따르면, 국가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36%), 달라질 것 없다 (29%), 개선될 것이다 (27%)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52%), 나빠질 것이다 (27%), 나아질 것이다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관망층(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그룹)이 대북지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V. 긴장요인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큰 자산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비판적인 분석과 병행하여, 통일에 대한 생각과 노력을 향후에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장요인을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주의를 모아보면, 독일 사례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사회적·내적 통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무력통일에 의한 사회통합의 한계를, 예멘도 국민의 합의가 없는 무력적이며 정치적인 사회통합이 갖게 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무력통일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그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평화통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단없는 평화통일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평화통일은 당사국만의 문제를 벗어나 주변국의 지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서독이 기울인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서독은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예로,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안보불안을 상당부분 해소시켰다(통일교육원, 2018).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주변국들간의 관계 역학 구도를 주시하고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불가피하다. 통일교육원(2018)의 분석에 따르면, 21세기 국제질서는 여전히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것을 예측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주요 국가에 의한 다극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제 문제는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고 해결되어가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EU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거기다가 신흥강국의 등장은 국제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을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양국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정책을 추구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사적 적대감으로 중국과의 갈등관계 속에 있는 일본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더욱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자위대의 해외파병,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추진 등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러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신동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의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러일간의 밀착 관계가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동역학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중국과 긴밀한 상호 이해 속에서 우호 관계를 조화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평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평화적인 다자간 협력 체제와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발판을 다져나가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대북정책과 평화통일 전략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많은 노력과 결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부침이 동반되는 경향이 짙다.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확실성이 결핍된 자세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8b). 이것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가치와 문화에 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음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향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다. 이와 관련된 조사 인터뷰에서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통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통일비용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한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고 막연히 회피할 문제도 아니다.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대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의 밑바탕에는 무턱대고 많은 돈을 쌓아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수학공식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또한 통일비용보다 통일 편익으로 문제의 핵심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북 협력정책을 통한 식량 및 의료지원은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지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지게 되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의료지출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다. 통일 이전 대북정책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통일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계산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닥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통일비용 문제는 자료수집으로 시작하여 해결방법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연구도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도 뒤따라야 할 것을 보인다. 통일 이전에 통일 비용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던 서독이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과 사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벤치마크이다.

통일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통합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통합 수준이 느슨하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는 갈등이 많거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의 통일 전후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명확하다. 한국이 사회통합이나 기타 주요 사회지표에서 독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독일이 높은 경제력과 사회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정신적인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가 지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자는 이 조사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과 북이 서로 말도 이상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할 지, ...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나중에 미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 갈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을 직면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한국이 서 있는 위치에서의 사회통합 수준은 향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정진해나가야 할 출발점 인식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수준은 31개 국가 중에서 25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김창환 외, 2012). 사회정의는 ‘빈곤 예방, 교육 참여, 노동시장 통합, 사회통합, 건강, 세대간 정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연금, 국가채무,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조사결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 5년 주기로 측정된 사회통합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였다. 이 조사에서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4개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포용은 구성원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용 시민적 자유와 참여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 사회이동은 교육을 통한 이동 가능성을, 사회갈등과 관리는 민주주의 지수와 자살률, 노동 조건 등을 측정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의 사회통합 지수가 0.8~0.9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8개 나라는 지수가 0.6~0.8수준, 한국이 속한 최하위 그룹은 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 8개국으로 이들 나라의 사회통합 지수는 0.4 이하이다.

< 5>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지수 순위 및 지수값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연 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과 관리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1995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2000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2005	29	0.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2010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2015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년 동안 순위 변화가 없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2000년대 중반에 하락한 후 회복세에 있다. 사회갈등과 관리 수준은 1995년 이후 크게 하락한 후 일부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여 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악화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의 문제로 나타났다.

<표 6> 한국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연 도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	0.810	9	0.999	9	0.158	28	0.255	26	1.000	1
2000	0.642	18	0.995	17	0.157	28	0.167	27	1.000	1
2005	0.045	29	0.997	15	0.249	24	0.053	29	1.000	1
2010	0.000	30	1.000	12	0.259	24	0.028	29	1.000	1
2015	0.000	30	1.000	16	0.311	24	0.065	27	1.000	1

삶의 만족도, 타인신뢰도, 정부신뢰도, 미래불안, 투표율, 범죄율, 사회관계, 50대 고립감 8개 지표로 구성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사회통합성 보고서(2016)에서도 한국은 4가지 지표: 삶의 만족도(28위/35개국), 정부신뢰도(29위/33개국), 미래불안(14위/15개국), 50대 고립감(34위/34위)에서 아주 낮은 순위로 파악되었다(한겨레, 2016/10/12). 미래 불안 요인으로 실직과 취업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격차 사회갈등요인과 결합을 하게 되면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남북한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체제의 이질성, 경제사회 격차가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노력과 통일 이후사회갈등 문제 요인으로서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 사회질서 형태로서의 사회 관습, 제도, 문화라는 환경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 관습, 제도,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회 관습, 제도, 문화의 중심부에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뷰에서 사회 가치와 문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한 교육학자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과 북이]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남과 북이] 진짜로 연방제 수준의 통일이든, 남과 북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하고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통일은 이루지 못할 것 같다”

VI. 결론 : 통일교육의 미래를 향하여

70여 년간을 분단국가로 지내 온 한국이 북한과 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한 교육학자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한국이] 북한하고 한나라라는 것은 옛날에 조선, 고려라고 하는 나라, 오천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충격적이며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 이상 고정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손에 잡히는 분석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준비해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 가치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살펴보자. 사실상 서독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¹⁾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구섭(2009)은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다 성인들, 특히 노년층, 여성, 실업자 및 조기 퇴직자, 저소득층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문화와 서독 사람들의 정치역량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통일부, 2016).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일 이후 성인들의 사회통합 역량 등 정치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교육, 정치교육, 경제교육, 법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독 국민을 위해서는 통일의 역사적 의의와 통일비용 부담 이해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동독 국민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문화사회 등 정치·경제·사회 체제 이해; 유럽통합; 법, 세법, 금융, 복지 등의 일상생활, 세미나 혹은 상호방문 교류를 통한 동서독 주민 통합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강구섭, 2009; 이병준, 1999). 무엇보다도 1993년 동서독 지역의 심리적인 통합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내적 통합’이라는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1997년부터 심리적 통합에 주력하였다(김창환, 2016). 서독의 정치교육은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던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던지, 문제해결을 위

1)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통일 전에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 두 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전자는 초·중등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통일교육원, 2018; 통일부, 2016). 그러나 정책 초점과 대상은 성인에게 맞춰졌다.

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던지 또는 찬성하여 지지하던지 등 본인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타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판단능력”(송창석, 2005)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대별로 과제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주민의 심리적인 통합을 위한 ‘내적 통합’에 중점을 둔 것이 한 예이다. 그리고 연방정치교육센터(BPB)²⁾, 주정치교육원, 시민대학, 노조, 교회, 정당(정당재단), 유럽기금,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 종교단체, 노동조합/협회/동호회 등의 민간단체가 주체 역할을 담당하였다(<표 7> 참조).

<표 7> 독일의 주요 정치교육 기관

주요 정치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방정치교육센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센터 바이에른 주정치교육센터 베를린 주정치교육센터 브레멘 주정치교육센터 함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헤센 주정치교육센터 니더작센 주정치교육센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치교육센터 라인란트-팔츠 주정치교육센터 자르란트 주정치교육센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치교육센터
내독성	전독연구소
정당 재단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콜라드-아데나우어 재단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개신교 정치교육기관 카톨릭 정치교육기관 경제단체 정치교육기관 정치 관련 연구소 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내무부 산하기관이다. 주요사업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 기관지‘의회’ 및 부록 ‘정치와 현대사회로부터’ 등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성인교육자 재교육 및 학습자료 출간과 포럼 등의 정치교육 행사 지원 등의 학교외 정치교육 및 학술회의 지원 사업; 강의활용용 출판물과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를 위한 정치교육교수법 세미나 등의 학교내 정치교육 지원사업; 연간 400여개의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교육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창석, 2005; 통일부, 2016). 그리고 연방내부부, 감독위원회, 주(州)정치교육원, 정치교육단체(노동조합 등 사회단체), 학술자문위원회와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이종희, 2017). 집행부는 정당대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위원회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감독위원회는 각 당의 연방하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자문위원회는 기본적인 정치교육 활동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주정치교육원과는 지역사회의 정치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을 수행한다.

2) 연방정치교육센터는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전신은 1918년 향토봉사중앙센터, 1919년 향토봉사제국센터, 1952년 향토봉사연방센터로서 과정을 거쳤다.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면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정당대표로 구성된 원장단으로 구성된다.

한국도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개정 공포(‘18.3.13)를 통해 교육대상 및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정책 실현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통일교육원, 2018). 현재 통일부는 교육부와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와는 선도대학 혹은 강좌개설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은 전국에 12개의 통일관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17년에 16개 대학과 1개 협의회로 총 17개를 설치하였다. 이들을 통해 시민교육을 확대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추구하는 사회통일교육은 크게 기본사업과 자율사업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통일강좌;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통일순회강좌; 분단현장 방문 등의 체험형통일교육; 통일교육위원워크숍 및 전문가포럼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사업은 지자체, 언론사 등고 1 공동주관하거나 언론 홍보를 병행하는 통일문화축제, 경진경연대회 등이다.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제일 먼저 지침이나 표준 강의안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주요 내용이 분단현실 이해, 북한 이해, 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한 통일외지 제고 등 통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사회 내적 통하을 위한 사회통합 역량, 통일 역량 등을 위한 영역 확장 및 유관 부처·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기본원칙이나 주요사업 측면에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연방정치교육원의 성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둘 모두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독일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통합과 사회가치 관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치교육단체를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의 초점이 독일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 역량을 길러주는데 주어졌다는 점은 우리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교육이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이다. 특히 정치교육 혹은 시민교육에 대한 거부감 또는 진부함은 동독인이나 탈북이민자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감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미래 통일교육 방향은 올바른 이해와 편향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립적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구섭. (2009).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15(2), 29-51.
- 강구섭. (2016).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성인정치교육의 성과와 한계.”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26(3), 51-73.
- 국회예산정책처. (2014).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 김지수. (2014). “북한교육 관련법령 특성과 남북한 교육 교류 및 통합.” 한국교육개발원 『제16차 KEDI 교육정책포럼』, 3-31.
- 김창환 외. (2012).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I) : 교육정의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창석. (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시스템 구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제16호, 277-300.
- 이병준. (1999).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의 성인교육분야의 변형과정에 대한 반성적 연구.” 한국 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26(3), 51-73.
- 이종희. (2017).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모델 :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선거연수원 비공개논문.
- 이해정 외. (2018). “현안과 과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정해식 외.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6). 『북한통계』. 통계청.
- 통일부. (2016). 『독일통일 총서 16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 통일교육원. (2018a). 『2018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원.
- (2018b). 『2018 통일문제이해』. 통일교육원.
- 최운재. (2018). “남북한 농축산 협력방안 심포지엄 주제강연 1.” 서울대학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향신문」. (2018).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18일 출범.” (6월 17일).
- 「노컷뉴스」. (2018).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통일경제특구설치, 장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해야.” (8월 20일).
- 「뉴스1」. (2018). 남북교류예산 1조…“평화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11월 12일).
- 「매경이코노미」. (2018). “남북교류협력사업 대비한다…전국 지자체 협력기금 신설 확충.” (9월 25일).
- 「아시아경제」. (2018). “남북정상회담 D-6…남북경협·통일 경제적 효과 주목.” (9월 12일).
- 「아시아투데이」. (2018). “[2019년 예산안]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 205억원으로 확대.” (8월 28일).
- 「중앙일보」. (2018). “박원순, 남북 교류 전담 조직 8월 출범…방북도 조만간 성사될 듯.” (6월 18일).
- 「한겨레」. (2016). “OECD사회지표로 본 한국, ‘최악’위험사회로 치달아.” (10월 12일).
-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2018). “여론속의 여론.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안보인식보고서.” (8월 25일)